

글로벌정책
리포트

경제산업정책실
박기주 연구위원

프랑스 재정 · 경제 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2026년 10월 29일(목)

프랑스 재정·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2026.10.29.(목) 박기주 연구위원

1. 프랑스의 복합위기 현황: '유럽의 새로운 병자' 로 전락

- ① 유로존 2위 경제대국인 프랑스는 구조적 재정적자, 국가채무폭증, 정치적 교착이 맞물린 복합 위기에 직면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함
- ② GDP대비 재정적자는 2024년 5.8%, 2026년 5.4%로 EU 상한선(3.0%)을 심각하게 위반해 과다재정적자 시정절차(EDP)가 개시되었으며, 국가채무는 2026년 2분기 말 3조 6,000억 유로(GDP 대비 119.0%)까지 치솟음.
- ③ 피치와 S&P의 국가신용등급 강등(AA→A+)에 이어 10년물 국채금리가 4.79%(독일 분트채 대비 스프레드 137bp)까지 급등하며 시장신뢰가 붕괴됨

2. 프랑스 경제·재정 위기의 4대 구조적 원인

- ① **만성적 재정적자와 부채함정**: 1974년 이후 단 한 번도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내지 못한 채 평시에도 경상적 재정적자(기초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됨. 금리정상화로 국채이자비용이 2025년 647억~670억 유로로 급증해 국방예산을 추월했고, 2030년(1,240억 유로)에는 단일최대지출 항목이 될 전망이다
- ② **과잉복지와 공공지출 경직성**: 공공지출이 GDP의 57.2%(2024년)로 유로존 최고수준이며, 특히 사회보호지출이 GDP의 32.2%에 달함. 낮은 실질은퇴연령으로 연금지출이 전체 공공지출의 4분의 1(24.4%, GDP의 14.4%)을 넘고 있음에도 2023년 정년연장(62→64세) 개혁이 유예되었고, 병원의 비의료 행정인력 비중이 34%에 달하는 등 비효율이 심각함. 여기에 지출구조 조정 없는 감세(법인세 인하·부유세 폐지)가 단행되어 세입기반만 잠식함
- ③ **관치 가격통제('요금방패')와 EDF 부실화**: 2021~2023년 에너지위기 당시 전기·가스요금을 인위적으로 억제한 '요금방패'에 연간 400억~450억 유로의 예산을 쏟아부어 가격신호를 왜곡하고 에너지 효율화 투자를 위축시킴. 원전가동중단(설비의 50% 정지) 속에 원가이하공급을 강요당한 국영전력공사(EDF)는 부채가 500억 유로 이상으로 폭증해 2023년 완전 재국유화되었으며, 보조금 폐지 후 2025년 가스가격이 9.7% 급등하는 부메랑을 맞음
- ④ **정치적 교착과 일회성 증세 의존**: 2024년 조기총선 이후 의회가 좌파·중도·극우로 3분열되어 2년여간 총리가 5명 교체되는 마비 상태에 빠짐(실질 GDP성장률 0.2~0.4%p 하락요인). 정치권이 복지 삭감 대신 대기업·부유층 대상 한시적 증세(200억 유로 이상)로만 적자를 만회하려하자 채권시장의 금리페널티가 본격화됨

3. 과잉복지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이론적·실증적 메커니즘

- ① **복지국가의 두 가지 악순환(Alesina, 1998; Perotti, 1996)**: 첫째, 이전지출·공공임금 팽창이 조세부담(Tax Wedge)상승과 민간투자·고용위축을 불러 저성장과 세원 잠식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악순환'이 작동함. 둘째, 고령화로 비대해진 부과방식(PAYG)연금의 수혜층과 공공노조가 기득권 동맹을 형성해 구조개혁을 저지하고 미래세대투자(R&D·교육)를 구축하는 '정치경제학적 악순환'이 고착화됨
- ② **재정조정 구성의 성패 법칙(Alesina, Favero, & Giavazzi, 2015, 2019)**: 증세 중심(TB)의 재정조정은 민간소비·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유발하고 채무비율축소에 실패함. 반면, 복지·연금 등 이전지출과 공공임금을 줄이는 지출삭감 중심(EB)의 재정조정은 미래 조세부담 완화기대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비케인즈적 성장효과'를 발현시켜 채무를 줄이고 선거

에서도 유권자의 재신임을 받음

4.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진단(프랑스와의 유사성)

- ① **초고령사회 진입과 잠재성장률 추락**: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24년 12월 20%를 돌파해 2050년 40%에 달할 전망이며, 잠재성장률은 2024~2026년 2.0%에서 2030년대 1% 초중반으로 급락할 위험에 처함
- ② **의무지출급증과 장기 재정악화**: 연금·건보 등 법정 의무지출 팽창과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출경직성으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5년 47.8%에서 2072년 173.0%까지 폭증할 것으로 추계됨
- ③ **공기업 부채를 통한 준재정적 물가억제**: 에너지위기 시 원료비연동제를 유예하고 요금을 억제한 결과, 한전 총부채가 200조원(누적적자 41조원)을 넘고 가스공사미수금이 9조원을 돌파하는 등 프랑스 EDF 사태와 동일한 '보이지 않는 준재정 부채' 위기를 겪고 있음

5.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한국 경제의 4대 정책 대안

- ① **재정관리(구속력 있는 재정준칙과 지출구조조정)**: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이내(국가채무 60% 초과 시 2.0%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한도초과 시 차년도 지출을 강제삭감하는 스위스·독일식 '부채브레이크'를 결합해야 함. 아울러 영점기준(Zero-base) 지출검토제도를 법제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해 확보한 재원을 AI·반도체 등 전략 R&D에 재배분해야 함
- ② **물가관리(거시정책 정합성과 표적 지원)**: 관치가격통제와 무차별 보조금을 지양하고 통화·건설 재정기조의 정합성을 확립해야 함. 유통구조개선으로 공급탄력성을 높이되, 고물가충격 시 일괄 요금동결 대신 저소득 한계가구에 한정된 '표적형 바우처·직접소득이전'으로 전환해야 함
- ③ **에너지관리(독립 규제거버넌스와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 정치적 요금통제를 막기 위해 요금 산정·인가권한을 정부에서 독립된 '독립 에너지규제위원회'로 이관하여 원료비연동제를 정상화해야 함. 에너지빈곤층 지원은 공기업 교차보조가 아닌 정부일반예산(바우처·효율화 사업)으로 분리하고, 원전(APR1400·SMR)생태계 고도화와 재생에너지·전력망(Grid)·ESS투자를 조화롭게 병행해야 함
- ④ **연금·노동개혁(완전적립식 신연금과 AI생산성 혁신)**: 2054년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과거 미적립 부채(구연금)는 일반재정 등으로 분리하고, 향후 납입분부터는 자신이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 돌려받는 '기대수익비 1.0의 완전적립식 계좌(KDI형 DC모델)'로 전환해야 함. 또한 연공서열형호봉제(30년차 임금이 1년차의 3.4배)를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해 고령층 계속 근로와 청년채용을 유도하고, 노동시장·규제개혁 및 AI전환을 통해 노동생산성(업무시간 3.8% 단축, 생산성 +1.0% 향상)과 잠재성장률(구조개혁 시 총+1.0%p 상승효과)을 극대화해야 함

1. 서론: 유럽 핵심국 프랑스의 위기 전이와 연구 배경

유로존(Eurozone)의 핵심 축이자 유럽연합(EU) 제2의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구조적 재정적자와 국가채무폭증, 정치적 교착상태가 맞물린 복합위기(Triple Crisis)에 직면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였다. 과거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 채권국이자 구제금융의 주도국이었던 프랑스는 2024년 이후 재정규율 상실과 잠재성장률 정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와 스페인 문도아메리카(Mundo America) 등 주요 외신으로부터 ‘유럽의 새로운 병자(The New Sick Man of Europe)’라는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블룸버그(Bloomberg) 역시 프랑스가 만성적 재정취약국의 대명사였던 이탈리아를 대신하여 ‘유럽재정위기의 상징(Europe's Poster Child of Fiscal Woe)’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하였다.

프랑스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경기순환적 침체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년간 누적된 과도한 사회복지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영, 그리고 에너지·물가위기 국면에서 단행된 포퓰리즘적 가격통제가 빚어낸 구조적 붕괴에 있다. 프랑스의 일반정부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7.2%(2024년 기준)에 달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로존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사회보호(복지·연금·보건)지출만 GDP의 32%를 상회한다. 반면,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경제성장은 높은 조세 부담(GDP 대비 45.6%)과 노동시장경직성으로 인해 1% 내외의 저성장에 갇혀 있다. 여기에 2021~2023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에너지위기 당시 도입된 ‘요금방패(Bouclier Tarifaire)’ 정책은 시장가격신호를 왜곡하고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영전력공사(EDF)의 부실화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3년 5.4%, 2024년 5.8%, 2025년 5.1~5.4%, 2026년 5.4%로 EU 재정준칙 상한선(3.0%)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으며, 2024년 7월 EU이사회로부터 과다재정적자 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개시 결정을 받았다. 국가채무 또한 2025년말 3조 4,610억 유로(GDP 대비 115.6~116.2%)에서 2026년 2분기말 기준 3조 6,000억 유로(약 4조 달러, GDP 대비 119.0%)까지 치솟으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5년 9월과 10월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로 전격 강등하였으며, 2026년 10월에는 프랑스 10년물 국채(OAT) 금리가 5%에 육박(4.79%)하고 독일국채(Bund)와의 스프레드가 17년 만의 최고치인 137bp까지 벌어지는 등 국가부도위험과 국제통화기금

(IMF)구제금융 신청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프랑스의 위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중대한 반면교사(反面敎師)를 제공한다. 한국은 2024년 12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50년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잠재성장률은 2024~2026년 2.0%에서 2030년대 1% 초중반으로 추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동시에 국회예산정책처(NABO)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7.8%에서 2072년 173.0%까지 폭증할 것으로 추계되며, 에너지위기 과정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한 결과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부채가 200조원을 돌파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대규모로 누적되는 등 프랑스와 판박이인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프랑스 경제·재정위기의 원인을 재정·복지·물가·에너지·정치경제학적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하버드 대학교 알베르토 알레시나(Alberto Alesina) 교수 등의 재정조정이론 및 국내외 실증연구를 토대로 과잉복지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메커니즘을 논증한 뒤,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재정관리·물가관리·에너지관리 및 구조개혁의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2. 프랑스 경제·재정 위기의 다층적 원인 진단

□ 만성적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구조적 폭증

프랑스의 경제적 위기는 단기적 외부충격의 산물이 아니라, 수십년간 누적된 재정규율해이와 비대해진 복지국가시스템이 고금리·저성장이라는 거시경제환경 변화와 충돌하며 폭발한 구조적 현상이다. 프랑스감사원(Cour des comptes)이 2024년 7월과 2025년 7월에 발표한 『공공재정 현황 및 전망(Public finances: situation and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경기침체나 외부의 거시경제적 충격이 부재한 평시(平時)에도 대규모 적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197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으며, 1995년 이후 유로존 4대 경제국 중 국가채무비율이 가장 큰 폭(+54%p)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이러한 채무누증은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투자나 연구개발(R&D)때문이 아니라, 경상적 기초재정수지 적자(Primary Deficit)의 만성적 누적에서 비롯되었다.

프랑스 정부의 다년도 공공재정계획법(LPFP) 및 안정성 프로그램이 제시한 재정목표는 매년 반복적으로 무력화되었다. 2023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당초 목표치인 GDP 대비 4.9%를 크게 웃도는 5.4%(약 170억 유로 초과적자)를 기록하였고, 2024년 재정적자 역시 당초 목표 4.4%에서 연말 추계 6.1%까지 치솟았다가 최종 5.8%를 기록하며 유로존 내 최고 적자국으로 전락하였다. 프랑스감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적자확대(+0.4%p)의 핵심원인은 위기대응지출이나 이자비용을 제외한 ‘핵심공공지출(Core Public Spending)’ 물량이 실질기준 2.7% 증가하여 실질 경제성장률의 두 배 속도로 팽창(+0.8%p 적자 요인)한 데 있다.¹⁾ 특히 고물가에 연동된 연금급여재평가 등으로 인해 사회보장지출이 실질 3.3%(사회급여 약 4%) 급증하였고, 지방정부지출 역시 인건비와 사회수당증가로 실질 2.7%(단기차입 16.5% 급증) 늘어났다. 반면 부가가치세(VAT), 법인세, 소득세 등 경세세수는 경기둔화와 과거 감세정책의 여파로 부진(+0.4%p 적자 요인)을 면치 못하였다.

2020년대까지 1% 안팎의 초저금리 환경에 가려져 있던 프랑스의 부채리스크는 글로벌 금리정상화와 함께 ‘부채함정(Debt Trap)’으로 돌변하였다. 기발행국채의 차환(Refinancing)금리가 3.5~4.8%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프랑스의 연간 국채이자비용은 2021년 350억 유로에서 2025년 647억~670억 유로로 급증하여 이미 국방예산(505억 유로)을 추월하였다. 나아가 이자비용은 2026년 792억 유로, 2027년 912억 유로, 2030년 1,240억 유로(국방예산의 1.6배 이상)에 달하여 교육·국방을 제치고 프랑스 정부의 최대 단일예산지출항목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 감사원은 2029년까지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재정조정(긴축)규모가 불과 2년 전 추산치인 500억 유로에서 2025년 기준 1,050억 유로로 두 배 이상 불어났으며, 국가채무비율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약 25년간 달성한 적이 없는 GDP 대비 1.1~1.8% 수준의 기초재정수지 흑자(Primary Surplus)를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특히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국채의 대부분을 자국민이 보유한 일본과 달리, 프랑스는 독자적 통화발권력이 없는 유로존 회원국이면서 국채의 약 50%를 외국인투자자가 보유(유럽중앙은행 15%, 자국보험사 10% 보유)하고 있어 대외신인도 하락 시 즉각적인 자본이탈과 금리급등에 노출되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1) 핵심지출증가(+0.8%p)와 세수부진(+0.4%p)의 합은 +1.2%p인데 전체 적자확대폭은 +0.4%p(5.4% → 5.8%)이다. 이는 에너지요금방패 등 '위기대응 한시지출의 종료(-0.8%p 적자축소요인)'가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 성장잠재력을 초과한 과잉복지와 공공지출의 경직성

프랑스 재정위기의 근원적 배후에는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초과하여 비대해진 복지국가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의 마리옹 코샤르(Marion Cochard)와 코랑탱 데레데크(Corentin Deredec)가 2025년 7~8월호 통화금융회보(Bulletin de la Banque de France, 제259/4호)에 발표한 연구 및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의 막심 디아즈(Maxime Diaz, 2026년 2월 『Insee Première』 제2093호)의 분석은 프랑스 공공지출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프랑스 중앙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프랑스의 공공지출은 GDP의 57.0%(2024년 57.2%)로 유로존 평균(49.5%)보다 7.5%p, 프랑스를 제외한 유로존 평균(47.7%)보다 무려 9.3%p 높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격차가 축소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1년부터 2023년 사이 독일은 노동·복지개혁(하르츠 개혁 등)을 통해 공공지출 증가폭을 GDP 대비 +0.7%p로 억제하고 네덜란드는 오히려 -0.9%p 감축한 반면, 프랑스는 동 기간 공공지출이 GDP 대비 +4.2%p 급증하며 1995년 유로존 5위에서 2023년 1위로 올라섰다.

프랑스와 유로존 평균 간 공공지출격차의 3분의 2(+5.0%p)는 전적으로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지출에서 기인한다. 프랑스의 사회보호지출은 GDP의 32.2%(2023년 기준, 유로존 평균 27.2%)에 달하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연금과 보건의료부문의 구조적 팽창이 두드러진다. 우선 연금지출(Pensions)은 2023년 GDP 대비 14.4%(2024년 13.9%, 4,070억 유로로 전체 공공지출의 24.4% 차지)에 달하여 유로존 평균(12.2%)을 2.2%p 상회한다. 2001~2023년 사이 프랑스 공공지출 총증가분의 약 50%(+2.3%p)가 연금지출증가에서 비롯되었다. 프랑스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에 비해 고령화 인구구조가 상대적으로 완만함에도 불구하고 연금지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는데, 이는 유럽평균보다 높은 연금소득대체율과 더불어 낮은 실질은퇴연령(Effective Retirement Age)때문이다.

실제로 낮은 실질은퇴연령 단일 요인만으로도 프랑스와 독일 간 연금지출 격차의 1.4%p(GDP 대비)가 설명된다. 연금수급자 1인당 보험료 납부자(부양비)는 2023년 1.8명에서 2070년 1.4명으로 하락하여 모든 시나리오에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2023년 마크롱 정부가 사회적 파업을 무릅쓰고 강행했던 법정정년연장(62세→64세) 개혁마저 정치적 타협과정에서 2026년 9월부터 시행이 유예(Suspended)되면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다시금

훼손되었다.

또한 보건의료지출(Healthcare)은 GDP 대비 11.7%로 유로존 평균(10.2%)보다 1.5%p 높다. 외래진료(+0.7%p)와 병원입원치료(+0.6%p, 전체 보건지출의 58% 이상 차지) 모두 유로존 평균을 웃돌고 있으나, 지출의 내부구조를 들여다보면 심각한 관료주의적 비효율이 발견된다. 프랑스의 병원고용비중은 전체 고용의 5%(유로존 조사대상국 중 1위)에 달하는데, 이 중 비의료 행정·지원인력(Non-medical staff) 비중이 34%에 달하여 독일(21%), 스페인(23%), 이탈리아(25%)를 크게 상회한다. 아울러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지출 증가율은 2016~2019년 연평균 1.2%에서 2019~2022년 연평균 2.2%로 가속화된 반면, 미래의료경쟁력을 좌우하는 보건의료 R&D투자는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보다 오히려 뒤처져 있다.

이 밖에도 가족수당(GDP 대비 2.3% vs 유로존 1.8%, +0.5%p), 실업급여(1.6% vs 1.3%, +0.3%p), 개인주거급여(0.7% vs 0.4%, +0.3%p) 등 모든 사회수당 항목에서 프랑스는 유로존 평균을 상회한다. 그러나 프랑스 중앙은행이 인용한 IMF의 공공지출효율성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보호 및 보건지출을 투입하고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 주요 비교국에 비해 효율성 변경(Efficiency Frontier)으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막대한 교육(GDP의 5.0%) 및 청년복지지출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프랑스청년층(15~29세) 중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니트(NEET)족 비중은 14.2%로 OECD 평균(12.6%)을 상회하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소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공급중시(Supply-side)경제학을 표방하며 법인세율을 33.3%에서 25%로 인하(연간 약 200억 유로 세수감소)하고 부유세(ISF) 및 주민세(Taxe d'habitation)를 폐지하여 전체 조세부담률을 2%p 이상 낮추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복지지출구조조정이나 높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세입기반만 잠식하고 구조적 재정적자를 고착화시키는 정책적 오판을 범하였다.

□ 물가-에너지 위기대응실패: 관치 가격통제(Bouclier Tarifaire)와 EDF의 부실화

프랑스의 재정기반을 결정적으로 잠식하고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마비시킨 또 하나의 중대 요인은 2021~2023년 글로벌 에너지위기 및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시행된 무차별적 가격통제정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2,000억 유로 이상을 투입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Quoi qu'il en coûte)’ 재정으로 경기

를 방어했던 프랑스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천연가스 및 전력 도매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10월 ‘요금방패(Bouclier Tarifaire, Tariff Shield)’로 명명된 대대적인 에너지 가격상한제를 도입하였다.

프랑스정부는 가계와 소상공인 전반을 대상으로 규제가스가격을 2021년 10월 수준으로 동결(2023년 인상폭 15% 제한)하고, 규제 전기요금인상률을 2022년 4%, 2023년~2024년 1월 15%로 강제 제한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리터당 유류비할인보조금까지 지급하였다. 프랑스통계청(INSEE)의 라프로그-주시(R. Lafrogne-Joussier, 2022, 『INSEE Analyses』 제75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요금방패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가격급등이 소비자물가(CPI)에 미치는 영향을 절반으로 축소시켜 2022년 12월 기준 프랑스의 연간 물가상승률을 6.7%(EU 평균 9.2%, 독일 9.6%)로 억제하는 착시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 물가억제는 거시경제와 국가재정, 그리고 에너지공기업에 막대한 재정비용과 소득역진성의 부작용을 전가하였다. 프랑스재무부(Trésor)의 클라베르(G. Clavères, 2022, 『Trésor-Éco』 제318호)의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악화로 프랑스가 입은 총국민소득 손실은 850억 유로(GDP의 3%)에 달했는데, 정부는 요금방패와 보조금을 통해 이 손실의 대부분을 국가예산으로 떠안았다. 에너지가격통제 및 보조금에 투입된 직접적 예산비용만 2022~2023년 연간 400억~450억 유로(GDP 대비 약 1.5~1.6%,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 추산 2023년 에너지공공서비스보상비용만 327억 유로)에 달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EC, 2023)가 지적했듯, 이 조치들은 취약계층에 표적화(Targeted)되지 않고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가구에 무차별 적용됨으로써 막대한 재정낭비를 초래하였다.

이와 동시에 요금방패정책은 시장의 가격신호(Price Signal)를 파괴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투자를 심각하게 잠식하였다. 유럽 경제정책학술지 『Intereconomics』(2023)의 분석에 따르면, 인위적인 요금동결은 에너지소비 절약을 유도하는 시장가격기능을 마비시켰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에너지효율화투자를 위축시켰다. 실제로 2023년 프랑스정부의 핵심건물 에너지효율 개보수지원사업인 ‘마프림레노브(MaPrimeRénov)’에 배정된 예산은 25억 유로로, 같은 해 요금방패에 쏟아부은 재정지출의 약 5%(5.6%)에 불과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EU국가 중 유일하게 202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최종에너지 소비의 23%) 달성에 실패하여 4%p(약 65TWh, 주로 재생열에너지 부문)의 미달분을 기록했는데, 이 부족분을 수입 천연가스로 대체함에 따라 매년 50억~90억 유로의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나아가 요금방패의 충격은 공급측면의 구조적 실패와 맞물려 프랑스국영 전력회사인 EDF를 사실상 재무적 파산 위기로 내몰았다. 과거 원전비중축소 논의와 유지보수지연 여파로 2022년 프랑스 원전설비의 절반가량이 배관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문제로 가동을 멈추었고, 차세대 원전인 플라망빌(Flamanville) 3호기(EPR) 건설은 17년간 지연되며 총사업비가 190억 유로 이상으로 폭증하였다. 원전발전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EDF는 천연가스 한계가격(Marginal Pricing)으로 결정되는 유럽전력도매시장에서 초고가로 전력을 사들여야 했으나, 정부는 요금방패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EDF로 하여금 원가 이하의 싼 가격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강제하였다. 그 결과 EDF의 순금융부채는 2021년 말 430억 유로에서 500억 유로 이상으로 폭증하였고, 프랑스정부는 2023년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EDF를 100% 완전 재국유화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2024~2025년 재정압박을 견디지 못한 정부가 요금방패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력소비세(TICFE)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자, 억눌렸던 물가압력이 분출되며 2025년 가스가격이 평균 9.7% 급등하는 등 '이연된 인플레이션(Repressed Inflation)'의 부메랑을 맞게 되었다.

□ 정치적 교착(Political Paralysis)과 금융시장의 신뢰 붕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에서 프랑스를 결정적인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의회권력의 파편화와 정치적 합의기제의 마비이다. 2024년 5~6월 마크롱 대통령의 전격적인 의회해산 및 조기총선 이후, 프랑스하원(국민의회)은 좌파연합(신인민전선·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범여권 중도연합, 극우국민연합(RN)의 3대 세력으로 분열되어 어느 진영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교착상태(Hung Parliament)에 빠졌다.

이후 출범한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내각은 2025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5%로 낮추기 위해 총 600억 유로(지출삭감 400억 유로, 대기업·고소득층 한시증세 200억 유로) 규모의 긴축예산안을 제시하고 헌법 제49조 3항(의회표결 없는 법안강행처리권)을 발동했으나, 좌파와 극우진영이 합세한 불신임안 가결로 2024년 12월 붕괴하였다. 뒤이어 출범한 프랑수아 바이루(François Bayrou) 내각(2025년 9월 붕괴)과 세바스티앙 르코르누(Sébastien Lecornu) 내각 등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잇달아 좌초하며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5명의 총리가 교체되는 초유의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었다. 프랑스 중앙은행(2025)과 프랑스경제관측소(OFCE, 2025)의 계량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예산안표류는 기업투자와 가계소비심리를 직접적으로 위축시켜 프랑스의 실질 GDP성장률을 0.2~0.4%p 깎아먹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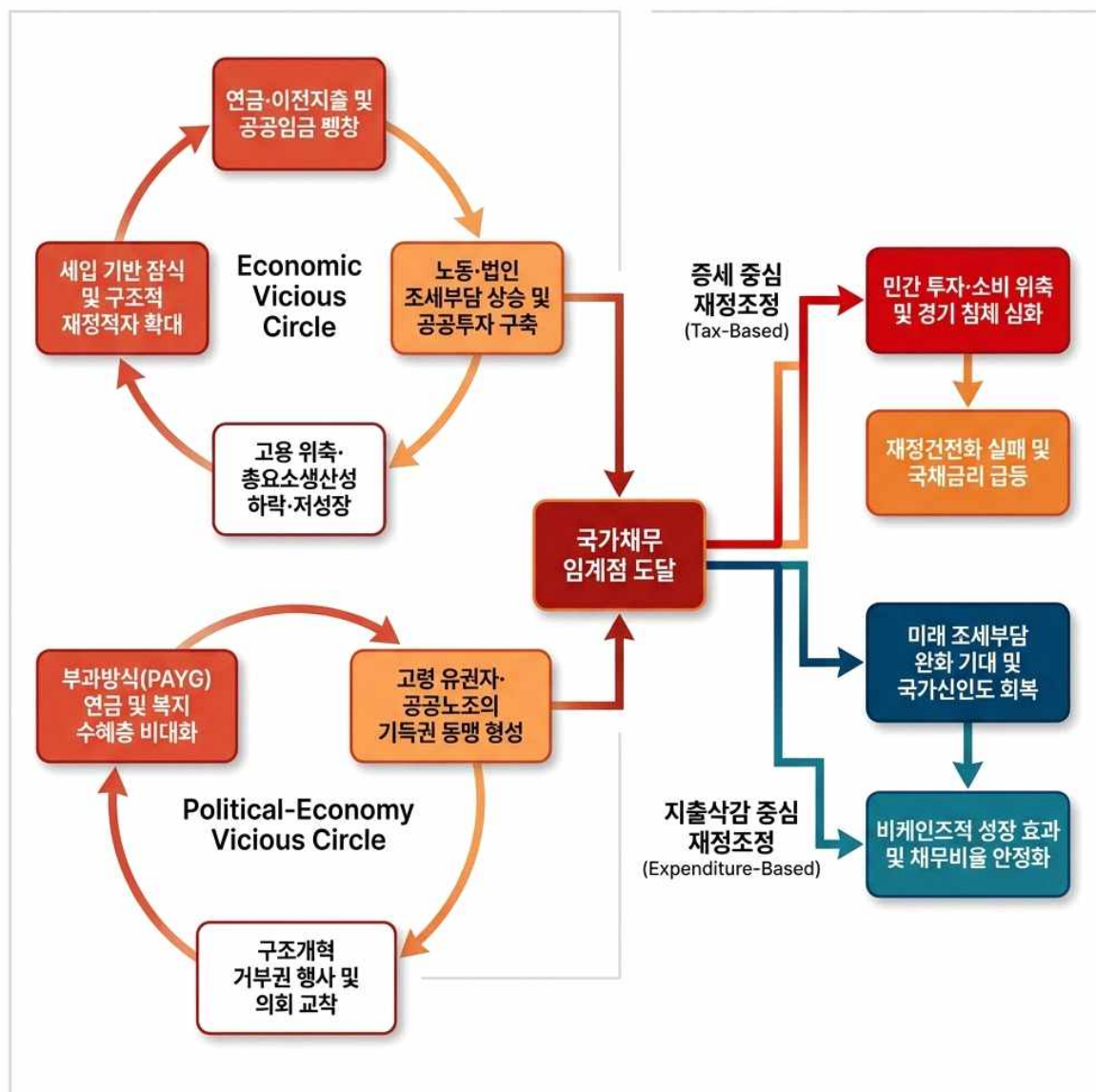
정치권이 복지지출삭감에는 저항하고 대기업·부유층 대상 일회성 증세(2025년 예산안 중 200억 유로 이상이 한시적 증세)로만 적자를 미봉하려 하자 국제 신용평가사와 채권시장은 즉각적인 징벌에 나섰다. 특히 프랑스 EDHEC 경영대학원(EDHEC Vox, 2025)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은행건전성규제(CRR)와 보험사지급여력규제(Solvency II)는 3대 신용평가사 중 중간등급을 적용하는 ‘차선등급규칙(Second-best rating rule)’을 따르는데, 2025년 9월 피치에 이어 10월 17일 S&P마저 프랑스를 A+로 강등함에 따라 프랑스는 규제상 초우량무위험등급인 신용품질단계 1등급(CQS 1, AAA~AA-)에서 2등급(CQS 2, A+~A-)으로 공식 격하되었다. 이로 인해 베인캐피털(Bain Capital), 오크트리(Oaktree) 등 유럽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운용사들이 프랑스 익스포저 한도규정을 긴급 수정하는 등 구조적 파장이 일었다.

영국 애버딘 인베스트먼트(Aberdeen Investments, 2025)와 더블라인 캐피털(DoubleLine Capital, 빌 캠벨, 2025.12), 브뤼겔 연구소(Bruegel, 2026.10)는 유로존 국채시장이 과거 개별국 국채가 완전대체재로 거래되던 ‘수렴체제(Convergence Regime, 1999~2008년)’에서 벗어나, 국채발행물량과 재정적자 규모에 비례해 가파른 우하향 수요곡선(Downward-sloping demand curve)과 금리페널티가 부과되는 ‘뉴노멀 체제’로 이행했다고 진단한다. 실제로 2026년 10월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540억 유로 지출삭감 및 병가수당축소 등 포함) 표결을 앞두고 전국적인 생계비시위와 폭동에 직면하자,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2002년 이후 최고치인 4.79~5.0%까지 치솟고 독일 분트채와의 스프레드는 137bp까지 확대되었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와 파이낸셜타임스 사설(2026.10.1, 「France Meets Fiscal Reality With a Crunch」)은 프랑스의 재정위기가 영국의 2022년 리즈 트러스(Liz Truss)발 길트채 파동보다 훨씬 심각하고 구조적인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3. 과잉복지와 비대칭적 재정팽창이 경제붕괴를 초래하는 이론적·실증적 메커니즘

□ 복지국가의 두 가지 악순환(Two Vicious Circles)과 성장잠재력 훼손

지속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과도한 복지와 사회정책이 어떻게 국가 경제를 구조적 침체와 재정 붕괴로 이끄는지는 현대 재정학 및 신정치경제학(New Political Economy)의 핵심 연구주제이다. 특히 하버드 대학교의 알베르토 알레시나(Alberto Alesina)교수와 로베르토 페로티(Roberto Perotti), 실비아 아르다냐(Silvia Ardagna), 카를로 파베로(Carlo Favero), 프란체스코 지아바치(Francesco Giavazzi) 등이 구축한 방대한 실증연구는 프랑스 위기의 인과적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알레시나(Alesina, 1998, IMF 연구논문 「Too Large and Too Small Governments」)와 페로티(Perotti, 1996)는 1960년대 이후 선진 산업국가의 정부규모팽창을 분석하면서, 재정지출의 구성이 도로·전력·초기인프라 및 순수 공공재 공급에서 가계에 대한 현금이전지출(연금·각종 사회수당)과 공공부문 임금(Government Wages)으로 급격히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이처럼 생산적 공공투자를 구축(Crowding-out)하며 팽창한 복지국가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악순환(Two Vicious Circles)’을 작동시켜 국가경제를 붕괴시킨다.

첫 번째는 ‘조세부담-성장둔화-세원잠식의 경제적 악순환’이다. 비대해진 재분배적 공공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회보장기여금(급여세),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부담(Tax Burden)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드 라 푸엔테(De la Fuente, 1997)와 알레시나·페로티(1997)가 실증했듯, 노동과 자본에 부과되는 높은 조세격차(Tax Wedge)는 기업의 단위노동비용을 상승시켜 국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근로의욕과 민간자본투자를 저해하여 구조적 실업(특히 청년실업 및 비공식 경제화)을 증가시키며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다. 성장률이 둔화되면 세입기반(Tax Base)이 축소되고 실업급여·빈곤수당 등 경기의존적 복지지출수요는 오히려 늘어나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된다. 프랑스가 OECD 최고수준의 조세부담률(GDP 대비 45.6%)과 공공지출비율(57.2%)을 동시에 유지하면서도 만성적인 5%대 재정적자와 1%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메커니즘에 있다.

두 번째는 ‘인구 고령화-수혜자 동맹-개혁 마비의 정치경제학적 악순환’이다. 알레시나는 특히 이탈리아와 프랑스 같은 유럽대륙형 복지국가에서 부과방식(Pay-As-You-Go, PAYG) 연금제도가 영구적인 재정건전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임을 지적한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은퇴자집단은 수적으로 다수를 점할 뿐 아니라,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투표참여율과 정치적 조직력이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을 형성한다. 실제로 유럽 주요국에서는 노동조합원 중 은퇴연금수급자가 과반을 차지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며, 이들은 공적연금 삭감이나 수급연령상향에 결사적으로 저항한다. 결과적으로 연금지출이 국가 예산을 독식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R&D, 청년사회안전망 및 인프라는 구축(Squeezed out)되고, 정부는 정치적 저항이 약한 미래투자예산만 삭감하여 공공지출의 효율성을 더욱 추락시킨다. 프랑스의 연금지출이 전체 공공지출의 4분의 1(24.4%, GDP의 13.9~14.4%)을 삼키고 있음에도 2023년 정년 64세 개혁마저 유예된 사태는 알레시나가 경고한 정치경제학적 악순환의 전형적인 실증사례이다.

□ 경기순응적 재정 비대칭성과 재정조정 구성(Composition)의 거시경제적 효과

재정위기가 누적되는 또 다른 축은 경기변동에 대한 재정정책의 비대칭적 반응(Asymmetry over the Business Cycle)이다. 갈리(Galí, 1994)가 촉발한 정부규모와 경기안정화 논의에 이어, 소렌슨·요샤(Sorensen & Yosha, 2002) 및 한국재정학회 연구 등이 실증하듯, 각국 정부는 불황기(Negative GDP growth)에는 정부지출을 급격히 늘리는 강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반면, 호황기(Positive GDP growth)에는 늘어난 지출을 삭감하지 못하는 비대칭성을 보인다. 특히 알레시나와 페로티(Alesina & Perotti, 1995, NBER Working Paper 제5214호)는 OECD국가들의 재정 기초를 분석하여, 재정팽창(Loose fiscal policy)은 주로 정부지출(이전지출 및 공공임금)의 급격한 증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재정긴축(Tight fiscal policy)은 지출삭감이 아닌 증세(Tax increases)를 통해 추진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비대칭적 톱니바퀴 효과(Ratchet Effect)가 반복되면 경기순환을 거칠 때마다 GDP 대비 공공지출과 조세부담, 국가채무가 계단식으로 폭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미 누적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식의 재정조정(Fiscal Adjustment/Consolidation)을 선택해야 하는가? 로머와 로머(Romer & Romer, 2010)가 고안하고 데브리스 외(Devries et al., 2011) 및 알레시나·파베로·지아바치(Alesina, Favero, & Giavazzi, 2015, 2019, 『Austerity: When It Works and When It Doesn't』, Princeton University Press)가 OECD 16개국의 약 3,500개 재정입법조치를 서사적 접근법(Narrative Approach)으로 추적·분석한 연구는 재정학계의 확고한 결론을 제시한다.

알레시나·페로티(1996, NBER Working Paper 제5730호), 알레시나·아르다냐(2010), 알레시나 외(2015, 2019)의 일관된 실증결과는 재정조정의 총량보다 구성(Composition)이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증세중심(TB)의 재정조정은 민간기업과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투자수익률을 직접 훼손하여 심각한 경기침체를 유발하며, 결국 분모인 GDP가 위축되어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데 실패한다. 반대로 정부이전지출(복지·연금)과 공공부문임금을 과감히 줄이는 지출삭감 중심(EB)의 재정조정은 경제주체들에게 향후 조세부담과 국채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를 심어주어 민간투자과 소비를 촉진하는 ‘비케인즈적 효과(Non-Keynesian Effects)’를 발현시키고 국가채무를 성공적으로 축소시킨다. 프랑스감사원(2025.7)이 프랑스정부의 2025년 적자감축계획(-0.4%p)에 대해 “구조적 지출 절감노력은 또다시 연기되었으며, 절반 가까

이가 일시적이고 불확실한 200억 유로 이상의 증세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극도로 취약하다”고 비판한 것은 이러한 실증이론에 정확히 부합한다.

□ 정치경제학적 파편화와 재정 규율의 붕괴

나아가 알레시나와 페로티(1995)는 어떠한 형태의 정부가 성공적인 재정건전화 달성을지를 분석하여, 다당제 연립정부(Coalition Governments)나 의회권력이 파편화된 분점정부일수록 재정조정성공률이 가장 낮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각 정당과 이익집단이 긴축의 고통을 상대진영에 전가하려는 ‘소모전(War of Attrition)’을 벌이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복지삭감은 무산되고 결국 차입을 늘리거나 한시적 증세로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알레시나, 페로티, 타바레스(Alesina, Perotti, & Tavares, 1998)가 OECD 국가들의 선거결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통념과 달리 단호하게 재정건전화를 단행한 정부는 유권자로부터 선거에서 처벌받지 않으며, 특히 이전지출과 공무원 임금삭감을 바탕으로 재정긴축을 완수한 정부는 오히려 유권자의 재신임(Electorally Rewarded)을 받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소수의 조직화된 기득권 로비집단(공공노조·연금기득권층)이 거리시위를 주도하더라도, 침묵하는 다수의 납세자와 미래세대는 재정파탄을 막고 거시경제안정을 회복하는 결단력 있는 정부를 지지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2024년 이후 프랑스는 파편화된 의회구조 속에서 극좌(LFI)와 극우(RN)의 포퓰리즘적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지출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상실함으로써, 이론이 예측한 최악의 경로인 ‘정치적 마비 → 증세 의존 → 성장추락 → 국채시장반란’의 전철을 밟고 있다.

4.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진단과 프랑스 사례의 반면교사

□ 초고령사회 진입과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프랑스의 재정·경제위기는 결코 바다 건너 유럽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 잠재성장률의 가파른 하락, 의무지출급증에 따른 장기재정악화, 그리고 에너지공기업의 천문학적 부채를 통한 관치물가억제는 프랑스가 위기에 빠져들기 직전의 구조적 징후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프랑스위기가 보여준 핵심교훈은 분모인 실질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분자인 복지지출이 경직적으로 팽창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한다는 점인데, 한국의 인구고령화 속도와 성장잠재력 둔화 속도는 프랑스보다 훨씬 가파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4년 12월 20%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1년 만인 2025년 말 21%를 넘어섰으며, 2035년 30%, 2050년 40%에 도달할 전망이다.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한 경제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이은경·천동민·김정욱·이동재(2024년 12월, 『BOK 이슈노트』 제2024-33호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가 팬데믹 충격과 성·연령·학력별 미시노동투입지표를 반영해 재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연 5% 내외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으로 하락한 데 이어 2024~2026년 중 2.0% 수준, 2025~2029년 중 1.8%, 그리고 2030년대에는 1% 초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감소라는 인구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혁신지연에 따른 총요소생산성(TFP) 저하와 자본투자증가세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 상태에서 프랑스식 보편적 복지확대나 선심성 이전지출이 결합될 경우, 한국경제는 프랑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세원고갈과 성장정체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 의무지출 급증에 따른 장기 재정건전성 위기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시점에서는 프랑스보다 낮으나, 증가속도와 장기궤적은 위험한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표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세입·세출구조가 유지될 경우 중앙·지방정부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비율(D1)은 2025년 GDP 대비 47.8%에서 2072년 173.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초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기초연

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법정 의무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상세입증가율은 둔화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정연구(김학수 선임연구위원 등)와 기획재정부·KDI·OECD 공동주최 ‘제10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마크 로빈슨(Mark Robinson) OECD 선임고문 및 배리 앤더슨(Barry Anderson) 전 미국 예산관리국(OMB) 부국장이 경고했듯, 기후변화대응·보건·연금·국방 등 중장기재정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구속력 있는 지출규율(Fiscal Discipline)이 확립되지 않으면 국가채무의 폭발적 누증을 막을 수 없다. 더욱이 한국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경직성 의무지출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 프랑스가 겪고 있는 ‘공공지출의 비효율성 및 경직성 함정’을 그대로 답습할 위험이 크다.

□ 공기업 부채를 통한 준재정적 물가억제의 그림자

프랑스가 2021~2023년 에너지위기 당시 ‘요금방패(Bouclier Tarifaire)’를 통해 전기·가스요금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가 400억~450억 유로의 재정적자와 국영전력공사(EDF)의 부채폭발(500억 유로 초과)을 초래한 사태는 한국의 에너지공기업 부실문제와 정확히 일치한다.

한국은 국제에너지가격이 폭등하는 동안 당장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원료비연동제를 유예하고 저렴한 전기·가스요금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한국전력공사는 2021년 2분기부터 2024년 2분기 말까지 41조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섰고, 한국가스공사는 실제 LNG도입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공급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민수용 미수금이 2022년 말 기준 이미 9조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부실을 떠안게 되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이 지적하듯, 프랑스가 요금방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일반예산 적자로 계상한 것과 달리 한국은 이를 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이라는 ‘보이지 않는 준재정(Quasi-fiscal) 부채’로 이연시켰을 뿐, 가격신호왜곡에 따른 에너지시장 비효율성과 미래납세자·소비자에게 전가될 요금인상 및 이자부담의 본질은 프랑스 EDF 사태와 다를 바가 없다.

5.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한국 경제의 핵심 정책 대안

프랑스가 과잉복지와 방만한 재정운영, 관치적 에너지가격 통제, 그리고 구조 개혁지연으로 인해 ‘유럽의 새로운 병자’로 전락한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경제는 재정관리, 물가관리, 에너지관리, 그리고 경제체질 및 재분배시스템의 4대 축에서 근본적이고 구속력 있는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 재정관리 부문: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구조조정

알레시나 외(2015, 2019)의 연구와 프랑스감사원(2025)의 경고가 증명하듯, 한 번 팽창한 의무지출과 국가채무는 정치적 선의만으로는 결코 통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제도적 제어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한국형 재정준칙(Fiscal Rule)’의 즉각적 법제화 및 자동보정메커니즘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와 국회(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에서 추진 중인 바와 같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0%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를 2.0% 이내로 축소(적자성 채무비율 역시 60% 이내 관리)하는 준칙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특히 프랑스가 다년도재정계획법(LPFP)을 두고도 구속력 부족과 재정고등위원회(HCFP)의 권한한계로 인해 매년 적자목표를 어겼던 실패(당초 목표 4.4%에서 연말 추계 6.1%까지 치솟았다가 최종 5.8%를 기록)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준칙 미준수 시 정부의 재정건전화 대책수립을 의무화하고, 프랑스 공공정책연구소(IFRAP)가 대안으로 제시한 스위스·독일식 ‘부채브레이크(Debt Brake, 보상계정 적자누적액이 기준치 초과 시 차년도 이후 지출상한선을 강제삭감하는 프로토콜)’를 결합해야 한다.

둘째, 증세가 아닌 지출구조조정(Expenditure-Based Adjustment) 중심의 강력한 지출검토제도(Spending Review) 정착이다.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알프룬 트리그바도티르(Alfrun Tryggvadottir) OECD 지출검토제도총괄과 김학수 KDI선임연구위원이 제언했듯, 기존 예산사업의 타당성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 지출검토제도를 예산편성과정의 상시적·핵심적 절차로 법제화해야 한다. 특히 학령인구감소를 반영하여 내국세 연동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공식을 개편하고, 중복·선심성 현금이전지출을 통폐합하여 확보된 재정여력을 AI·반도체 등 전략기술 R&D와 생산적 인프라에 재배분해야 한다.

□ 물가관리 부문: 거시건전성 기반의 정교한 물가안정과 미시적 구조개선

프랑스의 ‘요금방패’ 사례는 인플레이션 충격을 인위적인 가격상한제나 전 국민보조금으로 억누를 경우, 단기 지표물가는 낮아 보일지라도 재정적자가 폭증하고 향후 보조금 철회 시 물가가 다시 급등(2025년 가스요금 9.7% 상승)하는 풍선효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첫째, 관치적 가격통제(Administrative Price Controls)를 지양하고 통화·재정정책의 거시적 정합성(Policy Mix Consistency)을 확립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재정이 무차별적인 구매력지원금이나 에너지보조금을 살포하면 총수요를 자극하여 중앙은행의 금리인상효과를 상쇄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킨다. 따라서 물가관리의 기본축은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통화신용정책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간의 긴밀한 공조에 두어야 한다.

둘째, 공급측면의 유통구조혁신과 취약계층 표적(Targeted)지원으로의 전환이다. 농축수산물 및 필수소비재의 독과점적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스마트물류 및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공급탄력성을 높이는 미시적 구조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고유가·고물가 충격 발생 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일괄 인하하거나 요금을 동결하는 대신, 시장가격기능은 그대로 작동하게 두되 저소득 한계가구의 실질구매력 손실만을 정밀하게 보전하는 ‘표적형 바우처 및 직접소득 이전’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가격신호보존과 재정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 에너지 관리 부문: 원료비 연동제 정상화와 독립적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한국전력의 200조원대 부채와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미수금사태가 프랑스 EDF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요금 결정구조와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첫째,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제도적 강제성 확보 및 독립적 ‘에너지규제위원회’ 신설이다. 국제유가와 LNG·석탄도입가격이 상승할 때 이를 전기·가스소매요금에 시차 없이 투명하게 반영하는 원료비연동제가 정치적·선거적 고려에 의해 유보되지 않도록, 요금산정 및 인가권한을 정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가합의제기구인 ‘독립 에너지규제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전(누적적자 41조원)과 가스공사(미수금 9조원 이상)의 재무구조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한전채 과다발행이 시중 회사채시장을 구축하는 금융왜곡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수요관리효율화 및 에너지 복지에산의 일반재정화이다. 프랑스가 요금 방패에는 연간 450억 유로를 쏟아부으면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MaPrimeRénov')에는 그 5% 남짓인 25억 유로만 배정하여 구조적 에너지 절감에 실패했던 과오를 피해야 한다. 에너지요금을 정상화하여 산업계와 가계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및 고효율설비투자를 유도하되,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한전·가스공사의 교차보조(적자부담)가 아니라 정부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된 '에너지 바우처' 및 단열·고효율 기기교체지원사업으로 명확히 분리·집행해야 한다.

셋째, 공급안정성과 비용효율성을 겸비한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Energy Mix) 구축이다. 프랑스는 원전유지보수 소홀에 따른 가동중단(설비의 50% 정지)과 플라망빌 3호기 건설지연(17년, 190억 유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목표 미달(65TWh 부족분 가스수입대체로 연 50억~90억 유로 손실)이 동시에 겹치며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겪었다. 한국은 세계최고수준의 원전건설·운영역량(APR1400)과 소형모듈원전(SMR)생태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고도화하여 기저발전의 경제성과 탄소중립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국가기간전력망(Grid) 및 에너지저장장치(ESS)투자를 정합성 있게 병행함으로써 에너지안보와 비용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 경제체질 개선 및 공정한 재분배 시스템 구축: 연금·노동개혁을 통한 세대 간 형평성 확보

과잉복지의 덫을 피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전가하는 현행 사회보험시스템을 개혁하고 경제의 잠재성장을 자체를 끌어올리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첫째, 세대 간 착취를 차단하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도입 및 구조적 연금개혁이다. 프랑스가 부과방식(PAYG)연금의 구조적 적자(GDP의 14.4% 지출)를 해결하지 못해 국가재정이 마비된 것처럼, 한국의 국민연금 역시 현행 확정급여형(DB, 제5차 재정계산기준 보험료율 9%, 2054년 기금고갈전망) 부과식 전환구조를 유지할 경우 2054년 기금이 고갈되어 미래청년세대에게 감당 불가능한 보험료 폭탄을 전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2024년 2월 『KDI FOCUS』)이 제안한 '기대수익비 1.0의 완전적립식 신연금(확정기여형 DC전환)'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즉, 과거납입분에 대한 미적립충당금(구연금 부채)은 일반재정 등으로 별도 분리하여 해결하고, 향후 납입하는 보험료부터는 각 출생코호트(세대)가 자신이 낸 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받는 '기대수익비 1'의 완전적립식 계좌(DC형)로 전환함으로써 기금고갈우려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키고 20·30대 청년층의 제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역시 프랑스(병원비의료인력 34% 및 외래·의약품 과잉지출)의 사례를 경계하여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관리강화, 지불보상제도 개편을 통해 지출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이다. 한국은행이 2025년 4월 발간한 『BOK 이슈노트: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경직적인 호봉제(연공서열제)로 인해 30년 차 직장인의 임금이 1년차 신입사원보다 약 3.4배 높은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인을 꺾고 청년신규채용을 가로막는 핵심원인이다. 프랑스가 조기은퇴관행으로 연금재정파탄을 겪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은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조건하에 퇴직 후 재고용 등 고령층 계속근로제도를 확산시켜야 한다.

한국은행(이은경 외, 2024, 『BOK 이슈노트』 제2024-33호)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노동시장 비효율성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규제완화 등을 통한 총요소생산성(TFP) 향상 시 +0.7%p, 수도권 집중완화 및 일·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율 제고 시 +0.1~0.2%p,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향상 시 +0.1%p 등 총 1.0%p 내외의 잠재성장률 추가상승효과(2040년대 후반 기준)가 창출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행 조사국(2025년 5~6월 만 15~64세 취업자 5,512명 대상 가계조사) 연구에서 확인되었듯, 인공지능(AI)의 적극적 도입 및 활용은 근로자의 업무시간을 평균 3.8%(주당 약 1.5시간) 단축시켜 거시적으로 약 1.0%의 잠재적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가 이자비용과 연금지출에 예산을 빼앗겨 미국·중국 주도의 AI기술혁명에서 뒤처질 위기에 처한 것과 달리, 한국은 과감한 지출구조조정과 노동·연금개혁을 통해 확보한 국가적 역량을 AI전환 및 초격차 기술혁신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